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

보 도 자 료

http://www.motie.go.kr
http://www.mpss.go.kr

보도일시	2015년 5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	담당부서	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
담당과장	황수성(044-203-4360) 김경진(02-2100-0459)	담 당 자	우성훈 사무관(044-203-4365) 최영수 사무관(02-2100-0462)

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

-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 개최 -

· '안전산업 활성화 방안' **44개 과제 중 6개 이행 완료**
· 금년 중 **11건의 법령 제·개정 완료**하고, **3조원 이상 투자**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윤상직)와 **국민안전처**(장관 박인용)는 공동으로 '15.5.19.(화) 14시에 **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***를 개최하여,

○ 3.19일 **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**에서 발표된 **'안전산업 활성화 방안'**의 **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** 등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.

* 제4차 안전산업 육성지원단 회의 개요

- (일시·장소) '15.5.19일(화) 14:00~16:00, 서울청사 518호 회의실
- (참석자) 산업부 산업기반실장, 안전처 안전정책실장(공동단장), 기재부, 미래부, 국토부, 금융위 등 13개 부처 국장급

○ **'안전산업 활성화 방안'**은 **"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,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,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."**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,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.

□ 회의 결과, 세부과제들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, 국민 안전수요에 부응하고, 세계시장*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**조기 성과창출이 중요**하다는 점에 동의하고, 과제별 **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하고, 강력하게 추진**하기로 하였다.

* 전 세계 안전시장은 2,530억불 규모('11)로, '21년까지 연평균 8% 성장 전망(Freedonia)

○ 방안에 담긴 **총 11개 부처 44개 세부과제**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, 민간 안전투자 촉진에 필요한 아래 **6개 과제는 계획대로 완료**되었다.

① 민자 활용 촉진을 위한 **BTO, BTL 방식 보완** (기재부)

- "20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"에 **BTO-rs(위험분담형), BTO-a(손익공유형)** 등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 도입('15.4.20일)

* BTO-rs(Build · Transfer· Operate-risk sharing), BTO-a(B TO-adjusted)

② **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** (기재부)

-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**일몰 3년 연장**('17년까지), **공제율 인상**(3%→3/5/7%) 및 **공제대상 확대**(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·소방시설 등 추가)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·시행

③ **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성화** (금융위)

- '안전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'을 개정(3.31일)하여 **지원한도 확대**(건별 150·업체별 200 → 300억원), 안전 대진단과 연계하여 **지원대상 확대**

④ **안전분야 상생협력** 지원 (산업부, 기재부)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**대·중소 상생협력기금 사용대상**에 **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포함**

⑤ **숙박업소 화재감지기 규정** 개선 (안전처)

- '화재안전기준'을 개정하여 **숙박업소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**

⑥ **첨단안전산업협회** 설립 (산업부, 4.15일)

○ 향후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,

<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투자 확대 >

○ 먼저,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·보강 등 **'15년 예산**을 적기에 **조기 집행**하는 한편,(안전처 등)

* 안전대진단 5대 분야(도로·철도, 항만·어항, 수리시설, 학교시설, 급경사지) 예산투자: ('15) 1.9조원

- 금년 말까지 **에너지·도로·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**하여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.(산업·국토·해수부)

<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>

○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**'안전기준심의회'**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.(안전처)

○ 아울러, **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**(국토부, '15.下)하고, **가스안전**분야 점검·진단 **민간 개방** 대상을 조속히 검토(산업부)하여 **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**할 예정이다.

○ 재난·안전 분야 **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**가 수립(4월, 미래부)된 것에 더해, 금년 중으로 **안전산업 특수분류**(안)이 마련(안전처)되어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.

<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 >

○ 금년에만 271억원을 투자하여 **5대 신기술* 조기 확보**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(산업부) 소방 웨어러블 기기, 자동차 안전주행시스템, 건물·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, 국민안전 로봇, (안전처) 스마트 빅보드

○ 아울러, 대통령께서 안전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심에 따라, 안전제품, 사이버 보안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별도 TF(단장 : 주관부처 국장)를 구성하여 **구체적 추진 과제를 발굴·추진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협의체(안전처), 사이버보안 해외진출(중동 등) 촉진을 위한 TF(미래부) 등

□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**금년 중** 예산, 지방비 등 **3조원 이상을 투자**할 예정이며, **총 15개 법령 제·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**한다는 계획이다.

*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(국토부),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(금융위) 등

□ 회의를 공동 주관한 **양 부처 실장**들은 **'안전'은 국민 행복과 직결**되는 **정부의 기본 책무**임을 강조하고, **안전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전 대한민국 실현**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미션임을 강조하였다.

○ 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예측불가능성과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,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으며, **시설물 유지·보수, 기업재해 경감활동** 등 **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**함으로써 **국민안전을 강화**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

○ 산업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도 안전산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특히, **민자활용 촉진, 진단·점검 기능의 민간개방,** 보험기능 강화 등 **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철저 이행**을 통해 **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 마련을 당부**하였다.

□ 향후, 산업부와 안전처는 **육성 지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**하여 범정부 노력을 결집함으로써, '**국민안전 확보**'와 '**안전산업의 성장동력화**'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황수성 과장 (☎ 044-203-4360), 우성훈 사무관(☎ 044-203-4365),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김경진 과장 (☎ 02-2100-0459), 최영수 사무관(☎ 02-2100-04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**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 계획(안)**

□ 회의 개요

○ **(일시·장소) 5.19일(화) 14:00~16:00, 서울청사 518호 회의실**(마중물터)

○ **(참석자) 산업부 산업기반실장, 안전처 안전정책실장**(공동단장), 기재부, 미래부, 국토부, 금융위 등 **13개 부처 국장급**

○ **(논의내용) '안전산업 활성화 방안**(3.19일 제7차 무투회의 보고)'의 **과제별 추진 현황** 점검 및 **향후 계획** 논의

□ 세부 진행 계획(안)

시 간		세부 내용	비 고
14:00~14:05	5′	인사말씀	안전처 안전정책실장
14:05~14:10	5′	(발표1) 안전산업 활성화 추진경과 및 현황	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장
14:10~15:10	60′	(발표2) 부처별 세부 이행 계획 * 부처별 5분이내	관계부처
15:10~15:15	5′	(발표3) 향후 지원단 운영 및 안전산업 활성화 추진방안	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장
15:15~15:55	40′	논의 및 토론	
15:55~16:00	5′	마무리 말씀	산업부 산업기반실장

※ 회의 진행 : 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장

첨 부

「안전산업 활성화 방안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
2015. 5.

안전산업 육성 지원단

I. 추진 배경

□ **전세계 안전산업의 성장가능성은 크나, 국내 성장기반은 취약**

○ 안전수요가 증가하면서 **각국이 안전산업 육성을 국가 주요과제로** 추진하고 있어, **전세계 안전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***

* '11년 2,530억불 규모이며 '21년까지 연평균 8% 성장 전망 (Freedonia)

○ 반면, 국내 안전산업은 **규제가 시장규모와 직결**되는 **저부가가치 구조**이며 산업간 연계, 보험 등 **융·복합 서비스 발달이 미흡**

○ 또한, **증가하는 국민 안전수요에 대한 재정 대응 능력에 한계**가 있는 바, 규제개선 등을 통해 **민간 참여로 전환할 시점**

□ 이에, **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**('14.8.26)*에서 **'안전대진단'과 연계**한 **안전산업 육성 정책 수립 필요성** 제기

* 「국가 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(산업연구원)」

○ 범부처 **안전산업 육성 지원단**('14년 3회) 및 민간자문단 회의, 산업계 및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 도출

□ **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**('15.3.19)에서 '**안전사회 확보**'와 '**안전산업 성장**'의 **선순환 구조** 달성을 위한 「**안전산업 활성화 방안**」 발표

○ 아울러, 사이버보안, 안전제품 등 ICT 접목 안전산업을 중심으로 중동 등 신흥국에 대한 적극적인 **해외진출 활성화 필요**

* VIP 지시사항 : ①안전제품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방안 강구, ②안전산업 적극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, ③사이버보안 비즈니스 협력의 장 마련

◇ **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'국민 안전' 확보를 기반으로 '안전산업' 을 새로운 창조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**

II. 「안전산업 활성화 방안」 추진 현황

1.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

1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투자 확대

○ **정부 등의 안전투자 확대***를 통해 **국민안전 증진** 및 **수요 창출**

* (정부) 3.1조원(전년대비 19%↑), (공공기관) 9.3조원 (16%↑)

○ **민간기업**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(3조원 29%↑) 및 인센티브 부여, 도로·학교·공동주택 등 **민자 활용 시범사업** 추진

2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

○ 약 2만여개 **안전기준 정비***, 안전제품 기술기준 **선진화** 및 진단·점검 분야 **민간참여 확대** 등 개선

* 「안전기준심의회」를 구성·운영하고, 안전기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등

○ 안전산업 **산업분류체계** 신설 및 특성화대학 등 **전문인력 양성**

○ **민간의 자발적 안전조치**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 **사각지대 보완, 위험관리 서비스 확대, 의무보험 미비점 개선** 등 추진

3 안전 新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

○ **소방 웨어러블 기기, 안전로봇** 등 "5대 핵심기술" 조기 상용화 및 재난·안전분야 기술개발 지속 확대('14년 5,198 → '15년 6,004억원)

○ **공공정보 전면 개방**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권역별로 **첨단 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**

2. 추진 현황

□ 기존 방안의 **총 11개 부처 44개 세부이행과제**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결과, **6개 과제는 완료**되었고 **나머지 과제는 정상 추진 중**

① 민자 활용 촉진을 위한 **BTO, BTL 방식 보완** (기재부)

- "20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"에 **BTO-rs(위험분담형), BTO-a(손익공유형)** 등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 도입(4.20일)

* BTO-rs(Build · Transfer· Operate-risk sharing), BTO-a(B TO-adjusted)

② 안전설비 **투자세액공제 확대** (기재부)

-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**일몰 3년 연장**('17년까지), **공제율 인상** (3%→3/5/7%) 및 **공제대상 확대**(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·소방시설 등 추가)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('14.12.23일) 및 시행령('15.2.3일 시행) 개정

③ 안전설비 **투자펀드** 활성화 (금융위)

- '안전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'을 개정(3.31일)하여 **지원한도 확대**(건별 150·업체별 200 → 300억원), 안전 대진단과 연계하여 **지원대상 확대**

④ **안전분야 상생협력** 지원 (산업부)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별표1)을 개정('15.2.3일 시행)하여 **대·중소 상생협력기금 사용 대상**에 **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포함**

⑤ **숙박업소 화재감지기 규정** 개선 (안전처)

- '화재안전기준'을 개정(1.23일)하여 **숙박업소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**

⑥ **첨단안전산업협회** 설립 (산업부, 4.15일)

□ 일부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**효율적 이행을 위해 통합·조정**

* **의무보험 강화 및 보험서비스 확대** : 사각지대 보완 등 **8개 세부과제** → 유사내용이 세분화되어 추진·관리 곤란 → **5개 세부과제로 통합·조정**

○ 아울러 **VIP 지시사항** 등을 반영하여 **신규 과제 추가**

* **사이버보안 비즈니스 협력의 장** 마련(미래부 주관, 안전처 등 협조)

III. 향후 추진계획

〈 기본 방향 〉

1 세부과제의 신속 이행을 통한 조기 성과 창출

○ **정부투자**의 **적기 조기집행** 및 **민자 활용** 구체적 **성과창출**

* 안전대진단 : (4.30일) 완료 → (5.12일) 부처별 최종보고서 제출(→안전처) → (6월초) 안전대진단 결과보고 예정

2 법·제도적 인프라 확충

○ **정부가 할 수 있는 법령 제·개정** 사항은 **최대한 연내 이행**

* 법률 8, 시행령·규칙 3, 기준 4 (기완료 2, '15년 완료 9, '16년 이후 4)

3 민자 활용 시범사업, 진단·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확대 등 **민간 참여 및 투자 확대 적극 유도**

4 안전산업 및 사이버보안 해외 진출 적극 추진

○ 주관부처(안전처2, 미래부1)를 중심으로 T/F를 구성하여 구체화

1. 세부과제 이행 철저

1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투자 확대

1 정부·공공 투자 확대 및 조기 추진

○ 교량, 항만, 학교시설 등 노후 시설물 보수·보강 등 **'15년 예산**을 적기에 **조기 집행**(교육·국토·해수·농림부, 안전처)

* '안전대진단 5대 분야' 예산투자: ('15) 1.9조원

○ 雨期 前 **재해예방 조기 추진**(안전처), 민간기업(20여개)과 같이 금년중 **20개 국가 기반시스템 SW**에 대한 **안전진단·컨설팅**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 (미래부)

○ **에너지·도로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 마련**(~12월, 산업·국토·해수부), 산단내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및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(국토부)

2 민간 안전투자 확대 유도

○ **안전산업 육성 지원단** 회의에 **전경련** 등이 **참여**하여 주요 기업 안전투자 이행상황 및 애로사항 점검·논의(年2회, 산업부)

○ **3개 분야 민자활용 시설 개·보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**하고, 타 분야(철도, 항만 등)로 확산 추진(국토부, 안전처)

* (재해위험 저수지) 수요조사 후, '16.上 시범 대상지 선정
(노후 고속도로) 중부선·영동선 일부 노후구간 시설개량 '15.下 착공
(노후주택 재건축) 5월중 시범대상 1~2개 지구 선정, '15.下 착공

○ **(투자 인센티브 확대)** 동반성장 포상 시 안전투자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(산업부), 안전경영 인식 확산 활동* 강화(고용부)

* 주요 기업 안전 리더그룹회의 운영, 산업현장 안전점검 앱 체크리스트 130종 개발·보급 등('15년)

2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

1 안전기준 정비 및 진단·점검 기능 민간 개방 확대

○ **안전기준심의회 운영**(6월~) 등을 통해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추진(안전처)

○ **국제규격 수준**의 **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준** 제정(~'15년, 31개 품목)을 우선 추진(안전처)

* 소방용품 적정 내용연수 산출 및 지정을 위해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재상정('15.下),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(~9월) 등도 **연내 마무리**

○ **가스안전**분야 점검·진단 **민간 개방** 대상을 조속히 확정하고(산업부), **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**(국토부)

2 안전산업 분류체계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

○ '15년 실태조사(5~10월)를 통해 안전산업 특수분류(안) 마련 및 '16년 특수분류 제정(안전처, 통계청)

○ 재난·안전 분야 **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 마련**(4월) 후 시범 운영·평가를 통해 **정식분류 반영 추진**('17년, 미래부)

○ **특성화 전문대학교** 육성*(교육부), **기업 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** 지정·확대('15년 1개, 안전처), **SW안전 대학연구센터** 지정('15년 1개, 미래부)

* 소방·응급·보안분야 24개교 32개 학과 → '18년까지 연간 800명 이상 양성

3 의무보험 강화 및 보험 서비스 확대

○ **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**의 **법적 근거***를 마련하고, **관계부처 TF** 운영을 통해 **개별법상 도입** 유도(4월~, 안전처)

*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 추진('15.下~)

○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유예 대상의 보험가입 완료(~8월, 안전처) 및 **화재보험법 개정*** 관련 **보험상품 적시 출시** 추진(금융위)

* 의무보험 사고유형에 '화재' 뿐만 아니라 '폭발', '붕괴'도 포함('15.上 국회제출)

○ **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정**(~12월)을 통해 **환경책임보험 도입**('16.7월, 환경부)

* 법률 제정('14.12.31일) :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가입 의무화

○ **보험회사 부수업무**로 **위험관리 컨설팅** 업무 **허용**(~12월, 금융위), **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시범사업***(안전처) 추진

* '16~'20년간 100개 중소기업을 선정(연 20개)하여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지원

○ **체육시설 손해보험 적정 한도액**을 **마련**(~12월, 문체부)하고, **종업원 피해 보상 강화**를 위한 **약관*** **개정**(금융위) 및 **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조항** 마련*(안전처) 등 추진

*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의 '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' 등 10여개
* **「궤도운송법」 전면 개정** 추진(4~12월 연구용역 추진, '16년중 개정 완료)

3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

1 안전 관련 핵심기술 개발

○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하여 **5대 신기술 조기 확보 추진**(산업부, 안전처)

* (산업부) 소방 웨어러블 기기, 자동차 안전주행시스템, 건물·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, 국민안전 로봇, (안전처) 스마트 빅보드
  - 국민안전로봇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('15.8월 예타 통과시, 개발 착수)

○ **'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계획'**(5월, 미래부), **'재난안전과학기술 10개년 로드맵'**(5월, 미래부) 수립 및 **R&D 지원전략** 기획연구*(안전처) 등 실시

* '국민안전혁신 과학기술 지원전략 기획 연구' : 재난·안전 R&D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('15.5월~'16.4월)

2 공공 안전정보 개방을 통한 새 비즈니스 창출

○ **'재난안전 데이터 포털'**을 통해 재난안전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('15.下~, 154종 정보 중 '17년까지 117종 공개, 행자부)

* 위험물 탱크 정보, 무더위 쉼터 정보, 급경사지 DB, 재해위험지구 DB 등

○ 시설·교통분야 **취약 민간시설**(D, E등급) **안전정보 공개** 추진('15년내), **'민관 교통 빅데이터 HUB'**를 **구축**(~12월)하여 **교통안전 정보 개방** 및 **데이터 활용 교통안전서비스***를 개발·보급(국토부)

* 돌발정보 즉시 전파 서비스(3월~), 안전경로 안내 서비스('15.下~), 사고시 상황별 행동 매뉴얼 서비스('16.上~) 등

○ 안전 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(4월),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(10월) 등 개최(행자부, 중기청)

* 안전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개최 결과(4.30일) : 56개 팀 참가, 평가를 거쳐 5개 팀 수상(대상 2팀, 우수상 2팀, 특별상 1팀)

3 첨단 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

○ **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협의체*** 구성·운영(5월~)을 통해 **권역별 맞춤형 진출전략** 마련 및 **국가간 협력의제 발굴** 등 지원(안전처)

* 안전처(주관), 산업·외교·미래부 등 관계부처, KOTRA·수은·무보 등 공공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
  - 시장분석, 컨설팅, 수출기업 애로해결, 수출보험·보증지원 강화 등 지원

○ **ODA를 활용**하여 **필리핀**(홍수대비), **베트남·라오스**(홍수대비), **키르키즈스탄**(재해위험저감센터) 등 진출 지원(안전처, 각 부처)

○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(중기청, '15년 165억원), 소방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(안전처, '15년 0.5억원) 등 해외 진출 지원

○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차원의 비즈니스 협력의 장 마련(미래부)

2. 효율적 추진 및 지원 강화

□ (범정부 추진체계) '**안전산업 육성 지원단**(단장 : 산업부·안전처 실장)'을 중심으로 이행 점검 및 협의·조정

○ **참여 부처를 확대하고**(11개→15개), 분기별로 단순 과제 이행 여부가 아닌 **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**을 두고 **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** 추진

* 농림부, 행자부, 문체부, 통계청 등 추가

- 육성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부처간 협의·소통 활성화를 위해 **실무협의회**(산업부·안전처 과장) **구성·운영**

○ **과제 이행과 홍보간 연계**를 통해 **성과 창출 결과**를 **적극 홍보**

* (각부처) 과제별 추진성과를 적극 홍보하고, 산업부·안전처에 결과 통보
* (산업부·안전처) 홍보 성과 종합 관리 및 공동 홍보과제 발굴·추진

□ (법령정비) 총 15개 법령 중 **11개**는 **금년 중** 제·개정 등 **정비 완료 추진**

* 기 완료(2건) :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(2.3일),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(1.23일)

○ **'15년 대상 법령** (9건)

법 령 명	부처	주요 내용
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(31개 품목)	안전처	소방용품 기술기준 국제화
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	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
화재안전기준(비상방송설비)		비상방송설비의 제품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	국토부	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민간참여 허용 등
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(국토부 고시)		시설안전공단의 진단 전담시설물 일부를 민간에 개방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		취약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및 점검 실적 공개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	금융위	의무보험 사고유형에 화재 뿐만 아니라 폭발, 붕괴 등도 포함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	환경부	환경책임보험 제도운영을 위한 주요기준 마련
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문체부	체육시설 손해보험 적정 한도액 마련

○ '16년 이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안전처) 등 **4개 법령** 개정 추진

□ VIP 지시사항 이행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**별도 TF 구성·운영**

○ 주관부처(안전처2, 미래부1)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**과제별 이행 TF 구성**(단장 : 주관부처 국장)

- **상반기 중 구체적 추진 과제를 도출**하고,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

○ **추진 성과는 육성 지원단**에서 별도로 점검 및 평가

□ **'15년 투자계획**의 **차질 없는 이행**과 **'16년 예산 지원을 통한 수요 창출**

○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해 예산, 지방비 등 **'15년 3조원 이상을 투자**

- 교량, 수리시설, 학교 등 노후 시설물 보수·보강 및 재해예방 사업에 중점 투자 예정

○ 5대 신기술 R&D, 해외진출 지원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'16년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(기재·미래부, 안전처 협조)

*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2(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) :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제출(각부처 → 안전처) → 검토·통보(안전처 → 기재부)

* R&D 분야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
□ **기업 수요에 기반한 신규 과제 적극 발굴·추진**

○ 범부처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안전관리 민간 개방 및 참여 촉진, 민간투자 확대 유도, 유망 해외시장 개척, 신기술 개발 등 중·대형 신규 과제 발굴

* 예) 국토부: 「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」상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주체를 외부 민간기관으로 의무화
산업부: 산업기술 분류체계에 안전산업 분야 신설

○ 7개 안전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하드웨어, 솔루션(SW), 서비스 등 핵심과제를 도출하고,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- 전경련·상의·중견련·중기중앙회 등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 발굴 및 신규 정책 과제화 추진

* **기존 안전산업**과 **타 산업**(ICT, 디자인 등)**간 교류를 촉진**(간담회, 포럼 등)하여 **융합형 과제**를 모색(예: 어린이집 안전시스템(CCTV 포함) 디자인)

붙임1 **세부 이행 과제 및 담당 부처 (5월 현재)**

추진과제	담당부처
Ⅰ. '안전대진단' 연계 안전투자 확대	
1 정부·공공 투자를 통한 안전산업 수요 창출	
가 정부투자	
① 노후 시설물 등의 보수·보강	안전처
①-1 도로교량·철도교량	(국토부)
①-2 항만·어항	(해수부)
①-3 수리시설	(농식품부)
①-4 학교시설	(교육부)
①-5 급경사지	(안전처)
②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	안전처
③ 국가 기반 시스템의 SW 안전컨설팅 추진	미래부
나 공공기관 투자	
① 공기업 안전예산 기준·과목 신설	산업부
①-1 에너지 공기업	(산업부)
①-2 도로·철도 관련기관	(국토부)
①-3 항만관련 기관	(해수부)
②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안전보강 등 환경개선	국토부
③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	국토부
2 민간 안전투자 확대 유도	
가. 민간기업 안전투자 이행 점검	**산업부**
나. 민자 활용 노후 SOC 개·보수	
① 노후 시설물 민간 참여 수익모델 마련	안전처
② BTO, BTL 방식 보완	기재부
③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 고속도로 시설 개량	국토부
④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	국토부
다. 민간 안전투자 인센티브	
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	기재부
②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성화	금융위
③ 안전분야 상생협력 지원	산업부
④ 안전경영 인식 확산	고용부

추진과제	담당부처
Ⅱ. 규제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	
1 안전기준 정비 및 진단·점검 기능 전문화	
가. 안전기준 정비	**안전처**
나. 안전제품 기술기준 선진화	**안전처**
다. 공공기관 안전점검 민간 개방 계획 마련	**산업부**
① 가스안전분야	(산업부)
② 시설안전분야	(국토부)
라.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	**안전처**
마. 숙박업소 화재감지기 규정 개선	**안전처**
바.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	**안전처**
2 안전산업 분류체계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	
가. 안전산업 특수분류 신설	**안전처**
① 안전산업 특수분류 제정	(안전처)
②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코드신설	(미래부)
나. 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	**안전처**
① 특성화 전문대학	(교육부)
② 기업재난관리 특성화 대학원	(안전처)
③ S/W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	(미래부)
3 의무보험 강화 및 보험서비스 확대	
가. 재난보험 관리 강화 및 사각지대 보완	
① 의무보험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(기본법 개정, 화재보험대상 확대, 보상한도 규정, 제재 강화)	안전처
② 재난보험 사각지대 보완	금융위
②-1 재난보험 상품개발 및 화재보험법 개정	(금융위)
②-2 종업원 피해보상 강화	(금융위)
③ 환경책임보험 도입	환경부
나. 보험회사를 통한 위험관리 서비스 확대	
① 민간 위험관리기능 확대	금융위
② 기업재난 경감활동(BCP) 활성화	안전처
Ⅲ. 안전 新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	
1 안전 관련 핵심기술 개발	
가. 5대 신기술 사업 우선 개발 추진	
① 소방 웨어러블 기기	산업부

추진과제	담당부처
② 스마트 빅보드	안전처
③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	산업부
④ 건물·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	산업부
⑤ 국민안전 로봇	산업부
나. 재난·안전분야 핵심기술 R&D 투자 강화	
① 재난·안전분야 R&D 예산 확대	미래부
② 재난·안전기술 분야 공통 플랫폼 확대	미래부
③「재난·안전과학기술 10개년 로드맵」 수립	미래부
④ 국민안전혁신 과학기술 지원전략 수립	안전처
⑤ '첨단 안전산업 협회' 설립	산업부
2 공공 안전정보 개방을 통한 새 비즈니스 창출	
가. 공공정보 전면 개방	**안전처**
① 재난안전분야	(안전처)
② 시설·교통안전분야	(국토부)
나.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	**행자부**
3 첨단 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	
가. 안전산업 해외진출 방안 마련	**안전처**
나. ODA 연계 등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	안전처
다.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해외인증 지원	**안전처**
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	(중기청)
②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	(안전처)
라.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	**미래부**